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미래 100년 준비’

AI 활용 미래비전 선포
60년사 헌정식 등 꾸려져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 비전 문구 눈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은 3일 오전 11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비전 선포, 유공자 표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0년사’ 헌정식 등 다채롭게 꾸려졌다.

특히 직원들의 의견을 AI가 요약해 만든 비전 문구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기념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자치인재원 60주년을 함께 맞이해 더욱 뜻깊다”며 “지방공무원 교육의 중심인 자치인재원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맞춰 ‘로고디



3일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60주년 비전선포식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완주·전주 통합 관런
“주민투표는 찬·반 양측 동의 전제돼야”

(LOGODI) 글로벌포럼 2025’도 열려 필리핀 등 10개국 공무원교육기관장과 외교사절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주제로 미래 행정혁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윤 장관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놴다.

그는 “행안부는 통합 논의를 뒷받침하지만 주민투표 절차로 진행하려면 찬반 양측 모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방식 자체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는 ‘6자 간담회’(윤호중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윤희태 완주군수, 이성

운·안호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놴다.

윤 장관의 전북 방문에 맞춰 행사장 입구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단체가 각각 100여 명 규모로 집회를 열었다. 양측은 피켓을 들고 각각의 주장을 외쳤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주민 동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전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

전주, 최근 5년간 938건 사고 발생… 26명이 사망

사고 다발지는 수원… “집중 단속으로 근절 노력할”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울)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1,590건)와 천안시

(1,489건), 서울 강남구(1,480건), 고양시(1,407건), 평택시(1,389건), 화성시(1,370건), 용인시(1,310건)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와 포천시(각각 1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도

불공정 거래 침해 즉각 법적 대응 가능

민주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 청구제 도입 3법 발의

가맹점주와 납품업자, 대리점주들이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는 경우 즉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3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침해 금지청구제’를 신설해 경제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에 직면했을 때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에는 이미 금지청구제가 도입돼 부정경쟁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도 같은 제도가 신설됐다. 그러나 정작 가맹점주나 대리점 등 거래 현장에서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법률에는 이 제도가 없

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 소송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 회복이 늦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 등은 거래 생태계에서 중요한 축이지만, 원사업자와의 불균형한 지위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는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맹점주와 납품업자, 대리점주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돼 거래 질서의 공정성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확정

김윤덕 국토부장관
국정현안장관회의 참석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에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주택이 28만동(8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4만동, 교육시설 9000동 순으로 분포돼 있다는 것이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동(78%)이다.



상황이다.

그동안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고, 화재성

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

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내년 예산 전북 ‘AI 팩토리 테스트베드’ 1100억 증액 필요”

정동영 의원 “현재 400억원 반영… 독보적 경쟁력 갖추기 위해 내년에만 1500억원 투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현 통일부장관 겸임)이 내년도 전북 ‘AI 팩토리 테스트베드’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전북 AI 팩토리 사업비 400억원을 반영했지만,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 1,1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만 1,500억원은 시급히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는 6개월이 한 세대일 만큼 빠르게 발전한다”며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이미 피지컬AI 실증도시 기반을 갖췄다. 지난 7월 추경을 통해 382억 원을 확보했고,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했다.

이어 전주는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전국 유일하게 ‘AI 신뢰성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AI 전(全)주기 체계를 완성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성과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미래산업 기반을 잡은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피지컬AI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 곧 세계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조업을 위협하는 미국 관세 문제를 거론하며 “관세 장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행사 관계자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당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진보정치의 미래’… 정의당 권영국 대표, 오늘 전주서 강연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4일 오후 7시 전주시 완산구 전주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홀에서 초청 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은 ‘진보정치의 미래, 진보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회대 전환전북연대회의(가)가 주최하고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관한다.

권 대표는 강연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 진보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미래 진보정치가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지역 시민들과 당원들이 함께하는 이번 강연은 진보정치의 가치와 비전

박혜숙 전주시의원

문화경제위원장 선출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박혜숙(송천1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전주시의회는 3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문화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박혜숙 의원이 당선됐다고 밝히고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문화경제위원회가 지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관우 의장은 “문화경제위원회가 지역 문화와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장애인 이동·출입 보장

강태창 도의원, 조려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제4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조견



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동반 출입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재정사업장 현지 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지 의원)는 3일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 거점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지를 찾아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테마체험관과 풍력시험동 등을 시찰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해양 체험활동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해양·수상 안전



체험관과 실전 체험장을 둘러보았다. 특히 예결특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